

#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등 대응 훈련 필요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반기문재단 외교안보  
실장·전 주폴란드 대사



## ㉞ 두 개의 전쟁과 사이버 기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진행되어온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있다. 전쟁은 적군의 격퇴와 영토 확보와 같은 가시적인 군사적 성과를 최우선시한다. 그런데, 21세기의 전쟁은 과거와 달리 하이브리드전(戰)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가시적인 결과만을 고려하는 전통적 전쟁 수행방식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과 기업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전국이 활용하는 해킹티비스트(hacktivist)는 비국가행위자로서 정치, 사회, 종교 지향성을 표방하고, 경제적 이익 및 인터넷 자유, 신념 표출과 지지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다.

먼저,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경우부터 살펴본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최초의 국가 간 '사이버 전쟁(cyber war)'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대적 행위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는 2013년부터 러시아의 강도 높은 사이버 공격을 받아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방어력을 강화한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전세계에서 '사이버 의용군'을 모집하여 적극 활용한

다. 특히, 어나니머스(Anonymous)는 러시아의 군대와 중앙은행, 석유 가스회사 등을 해킹 공격한다. 그리고, 국제해킹단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사이버전(戰)'을 선포하고, 반전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백만 통의 전화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발송한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이버 작전은 제한적인 영향만을 주면서, 첩보 활동과 '영향력 공작'에 중점을 둔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시설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및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허위정보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친러 해킹티비스트인 킬넷(Killnet)은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세력과 나토(NATO) 회원국에 대해 광범위한 디도스(DDoS) 공격을 주도한다.

다음으로, 지난 1월 19일 6주간의 휴전에도달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를 살펴본다. 이스라엘에 비해,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역량도 절대 열세인 하마스는 후원국인 이란 및 가자지구 기반 해킹티비스트 스톰(Storm)-1133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전개한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2024년 7월까지, 이란 및 이란 후원그룹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약 30억 건의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 친(親)하마스 해킹티비스트는 핵심 인프라 공격, 웹사이트 차단, 허위 앱(app)의 확산 및 허위정보 캠페인 등을 수행한다. 반면, 친(親)이스라엘 해킹티비스트는 팔레스타인 정부기관 및 통신사, 국립은행 웹사이트 등 상대적으로 소수의 표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적었던 이유는 하마스의 낮은 인터넷 의존도와 팔레스타인 IT산업 기반의 취약성 및 개전 초기 무력공격에 따른 하마스 인프라 시설

파괴 등에 기인한다. 특히, 이스라엘이 평시 가자지구의 전기와 인터넷을 관리하고 통제해온 까닭에, 전시 가자지구 내의 관련 상황은 이스라엘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두 개의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전시 사이버 공격의 최대 피해자는 전투원이 아닌 비전투원(민간인)이다. 이는 주로 전기, 통신 및 가스 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해킹에서 연유한다. 민간인들은 사이버 공격이 야기하는 정전과 단수로 인한 일상적 불편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한다. 두 개의 전쟁 속에서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보다는 하마스의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는 바로 사이버전(戰)이 민간인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21세기의 전쟁이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전(戰)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유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이버 기술이 두 개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예의 관찰,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격의 경우, 인터넷 의존도가 세계 최하위권인 북한과는 정반대로, 초(超)연계된 한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해킹티비스트들이 진영 대결 양상을 나타내면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층원 확대, 범국가적 사이버 대응 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이버 억제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 유사 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평시 연대 및 공조 구축 또한 중요하다.

## 社說

# 전남 국립의대 신설, 국민과 약속 지켜야

## 정부·의료계 더 늦춰선 안돼

전남 국립의대 신설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결의대회가 2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전남 의대 설립으로 이어져 전남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국민 앞에서 발표한 약속이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대학을 추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이라는 합의를 이뤄낸 것도 도민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 1년 여의 진통 끝에 모아진 지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걸림돌이지만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은 정부와 의료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대 정원 증

원 논란과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핵심 인프라인 전남의 의대 신설이 별개라는 것도 명확하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은 도시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설립은 지역 내 의료인력 공급이 늘어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난제에 봉착한 농촌의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열악한 농·어촌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켜 지역 의료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는 것도 장점이다. 고령자 맞춤 돌봄 등 특화된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소멸도 늦출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헌법적 가치도 감안해야 한다.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전남의 의대 설립이 의정갈등 논란으로 지연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타협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고 지역의 존폐와 직결된 의료시스템은 어떤 정치적 현안보다도 급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 고질적 음주운전

## 끝까지 추적해 '백발백제' 해야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기강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범죄,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하지만, 이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 음주운전이 빈번한 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해 있다. 적발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 재발사태가 여전하다.

광주시 산하 기관인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고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소속 직원이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지방공무원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직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 사실은 본인이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온라인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산하기관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기관이 아닌 감사위가 적발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음주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다. '제식구 감싸기'이면서 공직자의 불법행위도 감시하지 못했다.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이 직원에게 징계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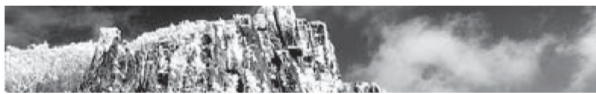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음주 공직자의 일벌백제가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 모두 끝까지 추적해서 백발백제로 강력하게 적결해 나가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주의가 답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강화로 미국행을 포기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23일(현지 시간) 파나마 카리브해 연안 가르디 수그부드에서 작은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아들이 어려 모지 가까운 곳에서 사니 장사(葬事)를 지내는 흉내를 내고, 시전 근처로 옮기니 물건 파는 흉내를 내어 글뚱 근처로 이사회 공부해 시켰다는 맹자의 어머니.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는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와 지혜로운 어머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었다. 허나 오늘 날 극단적인 교육열을 내비치는 학부모들의 모습과도 연결되며 어느새 조롱과 풍자의 대명사로 변모하기도 했다.

이런 풍자를 십분 활용해 최근 유튜브와 SNS를 장악한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에 까지 폭풍 같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제이미맘'이다. 제이미맘은 4세 제이미의 사교육을 위해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며 '학원 라이딩'에 힘쓴다. 명품패딩과 명품백을 장착하고 외제차를 타는 제이미맘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제이미~ 장난감 던지지 않아요~"라는 교양 넘치는 말투로 아이를 타이른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연기한 제이미맘은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강남 대치동 혹은 지역마다 존재하는 '학군 좋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치맘'(자식을 끄집어 아끼는 엄마들에게 고슴도치의 '도치'라는 단어가 붙어 생긴 신조어)을 고증한 캐릭터다. 제이미맘이 입고 나온 명품패딩은 그동안 '강남 학부모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

행했지만, 이와 같은 풍자에 굽힌(?) 이들의 손절로 당근마켓을 도배하고 있다니 그 영향력이 실로 놀랍다.

많은 이들이 이수지가 연기한 제이미맘에 열광하는 이유는 역시 '미친 현실고증' 탓이다. 우리 일상에 흔히 존재하는 모습을 약간 과장하기는 했지만, 탁월한 재치와 재현력으로 연출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속 시원한 즐거움을, 어떤 이들에게는 머쓱함을 안긴다. 해당 콘텐츠가 열풍인 것 자체가 모두 비슷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사교육 시장에는 '초등 의대반'에 이어 '7세 고시반', '4세 고시반'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교육 연령이 얼마나 낮아졌고 또 과열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과열된 사교육의 종착지는 필시 의대나 명문대일 것이다. 여기서 이어지는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아무리 생존을 위한 지상과제일지라도, 이를 위해 불행한 아이들이 쏟아져나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존중받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느냐마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멀리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양지 바른 곳마다 옮겨 심는 나무가 온전히 자라지 않는 것처럼.

곽지혜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